

앞으로 더 열심히
남의 일에 간섭하겠습니다

 **경인일보**

김준석 기자



‘기자’는 대개 정치·경제·사회 등 여
기저기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나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습니다. 때론 선망의 대
상이 되지만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
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벌
어지는 문제에 나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나에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기자
는 자신과 직접적 연관도 없으면서 그 내
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사람들에게 전
하고 때로는 거기서 간접적으로 해당 문
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
다. 이러한 기자들의 기사 보도들이 꼭
조롱을 당해야 하는 행위라 할 수는 없
지만 여러 이해관계자와 엮인 문제일수

록 그에 따른 견해가 달라 기사 방향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자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거
나 직접 끼어들어 방해하려 하는 대상으
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그러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굳이 자신과 직접 상
관없어 보일 수 있는 문제에, 욕먹을 게 뻔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에 대해 알아보
고 찾아가 따져 묻고 내주지도 않겠다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많은 정보공개를 요청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나 이슈·사안을 두고 자

신의 이기심에 휩싸여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벌어지는 행동이나 결정 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미리 알려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 어떤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수사기관, 민간기업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은밀한 수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결정 또는 정책 등에 대해 스스로 세상에 알리거나 누가 지적하 기 전에 시정하려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 다. 오히려 숨기려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래서 기자들은 굳이 간섭하고 따져 물으며 기사 보도라는 장치를 활용해 최대한 세 상을 이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게 기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취재 대상이 되는 사 건·사고나 사안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나 피해자들과 연관이 있을 때 취재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번 ‘전세자동차 업 체 원카’ 관련 보도를 할 때도 그랬습니 다. ‘전세자동차’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전세자동차 사업구조에 대한 피해 위험성과 보장되지 않은 지급보 증 등 허점을 하나하나 알게 됐을 때, 당 장 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일

반 사안과 달리 피해자 수가 많고 규모가 클 것 같아 혹시나 기사 보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 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할 수 록 원카의 전세자동차 사업구조가 갖는 위험성과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 는 요소들은 시간일 갈수록 여기저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일 내 일단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이를 인지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원카란 업 체가 혹시나 피해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만 치우쳐 완전하지 못한 사업구조 로 영입에 나섰을 가능성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즉 기자가 직접 전세자동차 계 약을 맺은 바는 없기 때문에 직접 연관된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기자로서 간섭해야 만 할 문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카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게 됐고 이후 여기저기서 수많은 연락을 받게 됐 습니다. 원카와 계약을 이미 맺었거나 전 세자동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셨 던 분들 계약을 맺었는데 지급보증서가 없거나 차량조차 받지 못해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연

보증금 안전벨트 없는 전세자동차... 결국 ‘사고’ 났다

원카 예정일 종료 안내 차인피안... 계약금 반환요청에 “돈 없어” 답변
 자금 사정일련 계약자 출파해 우려 “수익구조, 단단계약 다들 배 있어”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각종 우려 를 낳았던 전세자동차(12월 30일자 9면 보도)와 관련해 심층적인 피해자가 발생 했다.
 경찰 전세자동차 업체 원카 등에 따르 면 원카에게 거주하는 A씨는 지난 8월 원카와 4천만원 짜리 곡산 용역자 계약 을 맺었다.
 A씨는 선의 가격에 300만 1천만원 을 계약금으로 내고 11월까지 차량을 인 수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 기간이 지나 도 차량은 출고되지 않았고 원카 측은 차량 출고가 미뤄지고 있으니 잠시만 기 다려 달라고 하였다.
 통장 차가 뵈웠던 A씨는 원카에 허 무발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채졌던 것과 없어 기러 달라는 말 만 뒤를 돌려 받은 것이다.
 원카 A씨는 계약금 해지금과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 계약금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 있었다.
 A씨는 7개월차 차량이 나올 것이라 는 말을 들었지만 믿고 영입에 타고 다니 던 차량까지 받아 계약금에 보냈지만 4

‘이중 저당권’ 원카 사업구조, 분쟁·피해 불씨 품었다

전세금 60% 지급보증 40% 저당권
 보증금 40% 후 용역 담보 보증계약
 계약금 대출 추가금 표준계약 위반
 계약금 반환 시 소액자에 전기 위험
 원카에서 담보 원카의 경우 구조가 대, 이를 위해 원카(12월 30일자 보도)를 기점으로 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원카의 이중 저당권은 원카의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카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원카의 경우 구조가 대, 이를 위해 원카(12월 30일자 보도)를 기점으로 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원카의 이중 저당권은 원카의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카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원카의 경우 구조가 대, 이를 위해 원카(12월 30일자 보도)를 기점으로 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원카의 이중 저당권은 원카의 사업 구조를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수개월간 강제대책 미룬 ‘원카’ 성년 피해자들, 결국 집단소송

20여명, 사기형의 고소장 접수
 피해 강제 대책을 내놓았다면 전세 원카 업체 원카(12월 22일자 1면 보 도)의 ‘감금 무소식’에 참다못한 피해 자들이 집단 형사 고소의 민사소송 등재 나타났다.
 수백명에게 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

로 소문난 ‘가짜 최송하다’ “인도 상 황 속에서도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 지 않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수개월 동안 대학 미련 대신 ‘시간 을 날려’는 입장만 지켜온 원카 탓 에 향후 아무런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커져 피해자들 유 유

락을 받으면서 기사는 한편으론 기사 보 도를 결정하기 좋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가 너무 많고 지금 도 새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 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문 제에 간섭한 셈이지만 그래도 더 늘어날 수 있었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원카의 사업구조에 대해 자세 하게 들여다보고 관련된 자동차매매 업 계와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 정을 통해 취재해보니 원카에 대한 문제 점이 끊임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수 개월간 원카 보도를 이어나가 원카의 전 세자동차 영업 방식이 사실상 사기에 가 깡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고 다행히 올 해 초부터는 원카와 신규 계약을 맺는 피해자는 거의 사라졌다고 할 만큼 피해

확산이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연락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경인일보 보도가 원카 관련 피해를 만들어 냈다는 연락도 쏟아졌습니다. “원카에 대 한 부정적 기사 때문에 업체가 망하면 책 임을 질 것이냐?” “원카와 경쟁하는 업 체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게 아니 냐?” 이런 연락들이었습니다. 원카를 대 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기사가 보도된 건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 적 내용들은 전부 원카의 사업구조가 피 해자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서 기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인일보 보도가 없 었다면 원카가 잘못된 사업구조를 지속하

며 지금 드러난 규모보다 더욱 큰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큼니다. 또 원카가 아닌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기자가 광고비를 받고 나서 원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연락도 많았는데, 물론 기사는 원카 문제와 관련해 동종이든 타종이든 어떠한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경쟁 업체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기사를 쓰려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연락 때문에 원카 관련 기사 보도를 망설이거나 취재가 위축된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원카 문제를 기사로 보도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는 원카 피해자가 향후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큼은 굳건했기 때문에 다행히 기사를 보도하기로 한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7개월여 보도를 이어나갔고 그렇게 후속 기사 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원카의 사업구조와 관련한 문제는 설 새 없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수천만원의 차량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도 이를 반환 보증할 장치가 없었다는 점, 전문보증기관과 보증계약을 맺어 안전하다고 소비자에 홍보했지만 결국 아무런 보증계약 실체가 없었던 점, 전세자

동차 영업방식으로 받은 특허를 소비자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영업방식은 특허 내용과 일부 달랐던 점 등. 이러한 원카의 사업구조적 문제는 일반 계약자뿐만 아니라 원카가 수익원의 자금을 받으며 내준 지역본부나 대리점주 등에 계까지 막대한 피해를 안겨다줬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뒤 현재는 수천 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각각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원카와의 계약으로 인한 과거 자신의 피해 사례와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원카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소송 방법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인지한 원카 본사 소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담팀을 구성해 원카를 대상으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가 발단이 돼 드러난 원카 문제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원카에 대한 책임 규명이 명확히 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피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현재 상황만 봐도 서로 입게 된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하고자 피해자들이 서로 차량을 가압류할 경우 자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피해자들끼리 싸움만



발생할 가능성마저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현재 경찰 수사와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더욱더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7개월 동안 경인일보가 원카 문제를 단독 연속보도함으로써 감춰졌던 문제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됐으며, 한편에선 경인일보 보도가 원카 피해를 키웠다는 의견도 여전히 공존합니다. 하지만 기사는 이번 원카 관련 보도를 통해 오히려 이와 같이 피해 예상 규모가 커서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일단 있는 사실 그 대로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보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더

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굳이 남의 일에 간섭해야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기사를 써서 내보내야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피해 사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원카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구제된 피해도 거의 없어 앞으로가 더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과감한 취재와 기사 보도로 원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다짐입니다.

한 가지 피해자들이 더 간곡히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원카 문제에 대한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문제의 발단이 된 원카 관계자 등의 신원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피해자들은 경인일보뿐만이 아닌 더 많은 언론사가 문제를 조명해 더 광범위하게 공론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몇몇 지상파 방송국과 중앙 일간지에서 관련 취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됐지만, 아직 실제 관련 기사 보도로 이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카는 결코 경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 곳곳의 문제이며 실제 피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